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05도798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진효근

원 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05. 1. 13. 선고 2004노1878 판결

판 결 선 고 2006. 5.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대한민국의 형사재판권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1967. 2. 9. 조약 제232호로 발효되고,

2001. 3. 29. 조약 제553호로 최종 개정된 것. 아래에서는 협정이라고만 한다.) 제1조(정의) (가)항 전문(前文)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 있는 아메리카합중국의 육군, 해군 또는 공군에 속하는 인원으로서 현역에 복무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나)항 전문(前文)은 ‘군속이라 함은 합중국의 국적을 가진 민간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합중국 군대에 고용되거나 동 군대에 근무하거나 또는 동반하는 자를 말하나,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 또는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협정 제22조(형사재판권) 제4항은 ‘본조의 전기 제 규정은 합중국 군 당국이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또는 대한민국에 통상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뜻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들이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들에 의하면,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 중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협정이 적용되는 군속의 개념에서 배제되므로, 그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형사재판권 등에 관하여 협정에서 정한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기록에 의하면, 미합중국 국적을 가진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인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범행 당시 10년 넘게 대한민국에 머물면서 한국인 아내와 결혼하여 가정을 마련하고 직장생활을 하는 등 생활근거지를 대한민국에 두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협정에서 말하는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바, 결국 피고인에게는 협정에서 정한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에 관한 형사재판권 관련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

나. 한편, 협정 제22조 제1항 (가)는 ‘합중국 군 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합중국 법령이 부여한 모든 형사재판권 및 징계권을 대한민

국 안에서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위 조항에 관한 합의의사록에서는 ‘합중국 법률의 현 상태에서 합중국 군 당국은 평화시에는 군속 및 가족에 대하여 유효한 형사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추후의 입법, 헌법 개정 또는 합중국 관계당국에 의한 결정의 결과로서 합중국 군사재판권의 범위가 변경된다면, 합중국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조항들은 1967. 2. 9. 협정 발효 당시의 한반도의 평시(平時)상태 즉, 1953. 7. 27. 발효된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른 정전(停戰)상태에서의 한반도의 평상시(平常時)에는 미합중국 군 당국의 군사재판권이 군속 및 그 가족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한반도의 비상상태 발생시 즉, 대한민국이 계엄령을 선포하는 경우(협정 제22조 제1항에 관한 합의의사록 및 양해사항)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2조가 적용되는 적대행위가 발생하는 경우(협정 제22조 제11항)에 대하여는, 협정에서 별도의 조항을 마련하여 대한민국의 형사재판권 행사가 즉시 정지되고 합중국 군 당국이 합중국 군대의 군속 및 가족에 대하여 전속적 형사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다.

위 조항들을 종합하면, 한반도의 평시상태에서 미합중국 군 당국은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에 대하여 형사재판권을 가지지 않으므로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형사재판권과 미합중국 군 당국의 형사재판권이 경합하는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고, 대한민국은 협정 제22조 제1항 (나)에 따라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이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저지른 범죄로서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권을 바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다. 따라서, 원심이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인 피고인이 대한민국 영역 안인 파주시에

서 공무집행 중 저지른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범행에 대하여 대한민국이 바로 형사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협정이 정한 대한민국의 형사재판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형의 양정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양승태 _____

주 심 대법관 강신욱 _____

 대법관 고현철 _____

 대법관 김지형 _____